

“전북 귀농귀촌지원책 재검토해야”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정호윤 도의원 “정책 성과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꼴찌 귀농귀촌 인구 절반이상이 도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 시군 전담부서 재정비를”

(2019년 기준)



전북도의회 농업경제위원회 정호윤 의원(전주1·더불어민주당)은 16일 도정질문에서 거의 나체 수준인 전북도 귀농·귀촌 실태를 지적하며, 귀농·귀촌 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따르면, 전북도가 지난 3년간 귀농·귀촌지원사업에 270억 가량을 지원하고 올해도 8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전북도 귀농·귀촌 인구는 2017년 2만2,187명, 2018년 2만1,058명, 2019년 1만9,145명으로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다가 제주도를 제외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것은 지난 2019년 귀농귀촌 인구 1만9,145명 중 도내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인구가 57%나 차지하고 있고, 정착 타 시도에서 유입된 인구는 8,291명으로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어, 그동안 몇백억을 들여 추진한 귀농·귀촌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별다른 성과를 못내고 있는 현재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내와 타 시·도에 이주한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을 세분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전북도의회가 지난 10월 도내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 328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인의 갈등 요인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명 중 1명꼴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전북도 차원의 ‘귀농귀촌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전북도에서 귀농·귀촌 홍보에 쏟아부은 예산만 10억이 넘는데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귀농·귀촌 정책을 잘 모른다고 응답했고 불만족한다는 비율도 4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제는 귀농귀촌 홍보물을 단순히 배포하는 수준을 벗어

나 직접적으로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각 시·군의 귀농귀촌 전담부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각 시·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나 경제농정국, 일자리경제실 등에 소속된 농촌지원, 농촌개발, 농촌협력과 등에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행정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중앙과 도·시·군의 귀농·귀촌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 내 추진체계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정 의원은 2020년 전북도 사회조사 결과, 인구성장률, 장애인구 추계, 출생자수, 합계출산율 등 모든 지표에서 나타난 전북도의 암울한 미래 상황을 지적하며,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 도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송하진 도시사 16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도내 아파트 경비노동자 78.8% 1년 미만 단기계약”

최영규 도의원, 도정질문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부분 65세 이상, 고용환경 열악... “개선책 마련을”

도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78.7%가 1년 미만의 단기계약으로 심각한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16일 제379회 도정질문에서, 지난 2월 9일부터 2월 17일까지 전북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220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경기, 충남, 경남 등 타 지역에서는 경비노동자들의 실태조사가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전북 지역에서는 도의회가 처음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도내 경비노동자 연령 평균은 66.4세로 응답자 중 60세 미만은 4%에 불과했으며, 65세에서 70세 미만은 43%를 차지했고, 60세에서

65세 미만이 31%를 차지해 60대가 74%로 가장 많았다.

특히, 70세 이상도 전체의 22%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비노동자 대부분이 건강, 체력, 활력도 등에서 취약한 고령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비노동자 갑질 등 열악한 노동여건이 계속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짧은 근로계약기간이다.

이번 조사결과, 도내 경비노동자의 근로계약기간은 6개월 미만이 31.3%,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47.4%, 1년에서 2년 미만이 15.4%, 2년 이상이 5.9%로 조사됐다.

경비노동자의 78.7%가 1년 미만 단기, 초단기 계약을 하고 있었으며, 반복되는 계약으로 인해 정당한 노동인권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비노동자는 대부분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면, 식사, 휴식 등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과 업무 보는 경비초소를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다.

하지만, 도내 경비노동자의 65%가 별도의 휴게공간 없이 근무공간 즉 경비초소와 휴게공간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실제로 노후된 아파트단지 경우 경비초소에 화장실이나 수도시설이 없는 경우도 있고, 1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24시간 머물러야 하는 등 경비노동자의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경비업무에 있어서도 경비원임에도 불구하고, 방범 업무는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19%였다.

경비 외 업무, 즉 청소와 분리수거가

업무의 50%, 주차, 택배, 조경관리 업무가 20%를 차지하는 등 방범 이외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경비노동자에게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됐다.

최영규 의원은 “경비직은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감시·단속직 근로자’ 혹은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근로계약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으며, 불공정한 근로계약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사실상 경비업무보다는 경비 외 업무에 훨씬 더 많은 노동을 하고 있어 감시·단속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조사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전북도 차원에서 경비노동자를 비롯한 도내 청소년노동자, 외국인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근로취약계층의 근로여건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 빅데이터 벨리, 대선공약과 연계 고려를”

김이재 도의원, 도정질문서 “도 주도 국가 벨리 구축 추진 필요”



새만금을 국가 빅데이터 벨리로 구축하기 위해 전북도의 선도적인 노력과 함께, 내년 대선공약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이재(더불어민주당, 전주4)의원은, 16일 제379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중국의 구이양 시를 예로 들며, “전북도 주도의 국

가 빅데이터벨리 추진의 필요성과 함께 신속하고 확실한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에 있을 대선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중국의 경우 12개성에 빅데이터 관리국이 있는데, 전북도 최소한 과단위 빅데이터조직이 필요하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교육을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관광업계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이 중요하다”며 전북도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정원미달 현상과 취업률감소, 대학진학률 증가”를 지적하며 “도내 특성화고의 학과, 교육과정, 교원 채용 및 재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단·평가가를 통한 혁신안 마련”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이재 의원은 “최근 급격하게 번지고 있는 ‘학폭 미투’와 관련해 도내 학생선수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 종목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고, 설문조사 후 사후조치 과정에서 응답자의 신분이 노출된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지역여건에 맞는 푸드플랜 수립해야”

박희자 도의원, 도정질문서

전북도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도내에서 소비하는 먹거리 순환시스템 구축과 먹거리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 ‘국가 및 지역의 푸드플랜 수립’을 채택해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와 충남, 완주군, 아산시 등 7개 지자체에서도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했거나, 수립 중에 있어서다.

전북도의회 박희자 의원은 16일 제



379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푸드플랜이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도역시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속적으로 생산자·소비자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현재까지도 푸드플랜에 대한 필요성은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생산자·소비자들이 푸드

플랜의 가치와 중요성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안정적 공급과 예측 가능한 소비자가 있는 학교급식부터 지역 먹거리 생산과 유통소비가 원활히 될 수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역 농산물의 생산·공급·유통·폐기·재활용까지 이어지는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해 사회·경제·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푸드플랜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도내 14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역 농산품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체로서 공공성 강화와 사유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정부 자치분권 과제 33개 중 1개만 완료 내년까지 모두 완료키로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과제 이행률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3개 과제 중 1개만 완료됐을 뿐이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기관별 이행상황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는 지난 2018년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1년 단위 시행계획인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내 33개 추진과제에 대한 6개 기관 이행상황을 평가한 것이다. 평가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 주민자치회 위원이 참여하는 ‘점검·평가 지원단’의 설문조사 결과도 반영됐다.

해당 기관은 위원회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다.

추진과제 33개 중 절반이 넘는 17개가 법령 제·개정 완료나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의 이유로 ‘보통’ 평가를 받았다.

16개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 ‘미흡’ 과제는 없었다.

진행상황 별로는 33개 중 지역생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과제만 끝마친 상태다. 나머지 32개는 모두 진행중으로 내년까지 완료하는 게 목표다.

또 현재까지 지방자치법과 지방일괄이양법, 경찰청 등 자치분권 관련 8개 법률의 제·개정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자치분권 관련 부수적인 법률 제·개정안 입법이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2단계 재정분권 방안도 합의안 도출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뉴시스

문 대통령, LH 직원 투기 의혹 관련 사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토지공사(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며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제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

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사과는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시흥·광명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폭로한 뒤 14일 만에 나왔다.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과 대신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를 내비쳤던 것과 달리, 이날은 사과의 뜻을 밝히며 회의 발언을 열었다.

LH 투기 의혹 규명만으로는 성난 민심을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동산 적폐 청산을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기에 앞서, 일련의 LH 사태 과정에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고려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

“정부, LH사태 ‘발본색원’에 역량 집중을”

이홍호 의원, “정부 노력 물거품으로 만든 악질 범죄”



국회 이홍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6일 “LH사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운 시기를 버티는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와 충격을 줬다”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팬데믹’으로 열심히 ‘영끌’해서 내 집 장만 좀 해 보려다 LH사태로 ‘영털’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LH사태는 집값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정부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악질 범죄 그 자체다”며 “어떻게든 내 집 한 칸 마련하고 주거 안정성을 지키려 했던 다수의 서민들을 배신한 적폐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어떤 국민도 LH와 그 임직원에게 토지와 주택 공급 관련 정보를 자신들의 부동산 투기 정보로 활용하라고 허락한 바 없다”며 “지금의 모습은 ‘공정’은 온데 간데 없고 ‘한탕주의’와 ‘떡볶이 남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리가 국민이 원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정치권은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탁상공론을 당장 멈추고, 정부는 명운을 건 모든 역량을 제의 LH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발본색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